

2013년 9월 7일 서울시 지방직 7급 행정학(A책형)

KG Passone / 7급, 9급 행정학 전임 / 행정학 박사 김만식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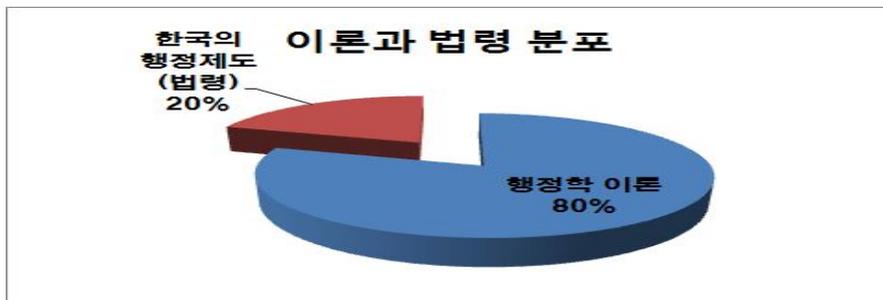
해설강의 : 2013. 9. 15(일) 14:00~

2013. 9. 7. 서울시 지방직 7급 [행정학] 출제문제 분석

1. 이론과 행정법령(한국의 행정) 출제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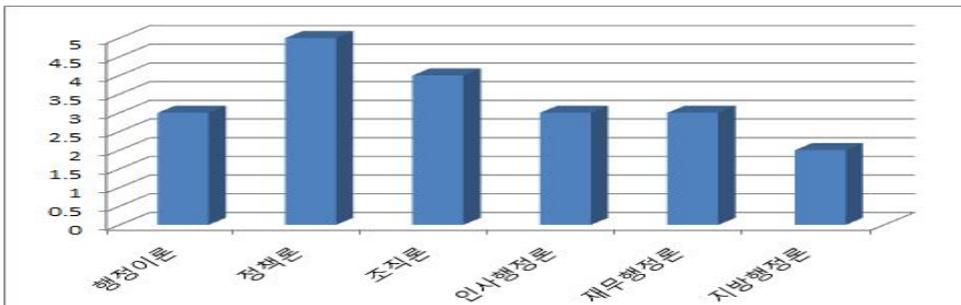
- (1) 행정학 이론 [16문항 80점]
- (2) 한국의 행정법령 [4문항 20점 - 12번, 13번, 14번, 16번]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세기본법, 국가재정법



2. 분야별 출제 분포

- (1) 행정이론 [3문항 15점]: 신공공관리 이론과 뉴거버넌스 이론과의 비교, 신뢰성과 윤리문제,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
- (2) 정책론 [5문항 25점]: Hogwood와 Peters의 정책변동 유형, 정책딜레마(dilemma) 이론, 합리모형에서 설명하는 합리성의 가정, 정책 개념, 정책결정 참여자로서의 관료의 역할
- (3) 조직론 [4문항 20점]: 조직구조의 상황요인, 갈등관리, 동기부여 이론, 지식정보사회가 행정조직에 미칠 영향
- (4) 인사행정론 [3문항 15점]: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 보수결정의 원칙,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과의 비교
- (5) 재무행정론 [3문항 15점]: 우리나라 정부예산의 과목구조, 예산 및 조세, 성과주의 예산제도
- (6) 지방행정론 [2문항 10점]: 서울시의 공동세 제도, D. S. Wright의 정부 간 관계모형



- ②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강화는 행정의 안정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 ③ 사회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직업공무원들의 행정적 재량행위에 대한 더욱 엄격한 통제가 요구된다.
- ④ 정부의 대응성과 능률성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진다.
- ⑤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료제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 2013년 시험대비 Point 행정학 교재 p. 612, 157~165.

정답▶ ① [해설] ②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강화는 행정의 능률성을 저해할 수 있다. ③ 사회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직업공무원들의 행정적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가 약화된다. ④ 정부의 대응성(예:대표관료제)과 능률성(예: 실적제)은 상충 관계를 가진다. ⑤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료제에 대한 통제완화가 필요하다.

문 4. 합리모형에서 설명하는 합리성의 가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문제 상황에 대한 명확성
- ② 각 대안간의 우선순위의 명확성
- ③ 목표달성에 대한 만족 기준의 명확성
- ④ 각 대안의 비용과 편익의 명확성
- 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2013년 시험대비 Point 행정학 교재 p. 303~304.

정답▶ ③ [해설] 만족 기준은 합리모형이 아니라 만족모형에서 고려하는 요소이다.

문 5. 신공공관리 이론과 뉴거버넌스 이론과의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두 이론 모두 투입보다는 산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
- ② 신공공관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비해서 뉴거버넌스는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 ③ 신공공관리는 조직내부 문제, 뉴거버넌스는 조직간 문제를 다룬다.
- ④ 신공공관리는 부문간 경쟁을, 뉴거버넌스는 부문간 협력을 강조한다.
- ⑤ 두 이론 모두 정부실패를 이념적 토대로 설정하여 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 2013년 시험대비 Point 행정학 교재 p. 98~99.

정답▶ ② [해설] 뉴거버넌스와 신공공관리의 유사점
뉴거버넌스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면서 이를 신공공관리와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다.
①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가 정부개혁전략으로 거의 동일한 시점에서 개발되었다.

- ㉠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제시되는 정부개혁전략이 유사하다.
- ㉡ 서비스 전달이라는 노젓기(rowing)보다는 정책결정이라는 방향잡기(steering)를 위한 도구와 기법의 개발을 중시한다.
- ㉢ 투입보다는 산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고 있다.
-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 필요성에 회의적이며, 경쟁과 조정원리를 신봉하고 있다.

문 6. 조직구조의 상황요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 ②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집권화가 높아질 것이다.
- ③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집권화가 높아질 것이다.
- ④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 ⑤ 조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 2013년 시험대비 Point 행정학 교재 p. 444~448.

- 정답▶⑤ [해설] ①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공식화가 낮아질 것이다.
②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분권화가 높아질 것이다.
③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분권화가 높아질 것이다.
④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공식화가 낮아질 것이다.

문 7. 신뢰성과 윤리문제가 국정 운영의 핵심 쟁점으로 제기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 ① 지방 분권화 증대에 따른 중앙정부의 통제력 약화
- ②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효율성 가치에 치중
- ③ 경제 논리를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 관리기법의 도입에 따른 생산성 강조
- ④ 정치적 후원의 증대와 고위공직자의 정치화에 따른 부패 가능성 증대
- ⑤ 전통적 관리방식과 새로운 관리방식 간의 충돌과 갈등

★ 2013년 시험대비 Point 행정학 교재 p. 136, 147, 166.

정답▶① [해설] 공직사회에 부패가 만연하고 공직자들의 윤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감은 팽배하게 되고 사회전반에 걸친 신뢰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며 생산의욕이 저하되어 건전한 사회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행정윤리는 특히 정부 혹은 공직자 신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OECD에서는 회원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신뢰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직윤리의 확보를 제시하고 있다. 신뢰의 적자는 정부의 정당성·정부조직·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며, 이는 특히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 등에 의해 증폭된다. 이러한 신뢰 확보 방안으로서 윤리적 정부가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신뢰성과 윤리문제가 국정운영의 핵심쟁점으로 제기되는 이유를 OECD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②번, ③번, ④번, ⑤번을 제시하고 있다.)

- ㉠ 공공부문에서의 개혁 : 전통적 관리방식과 새로운 관리방식 간의 충돌과 갈등 ⇒ 신공공관리 방식이 타율적·수동적으로 활용됨으로써 공직윤리의 핵심가치인 ‘자율성’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⑤번)
- ㉡ 재정적 압박(②번) :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효율성 가치에 치중 ⇒ 직접적 산출이 적고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규범적 문제나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게 된다.
- ㉢ 민간부문 관리기법의 도입 : 경제 논리를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 관리기법의 도입에 따른 생산성 강조(③번) ⇒ 공공성, 공익성 등한시
- ㉣ 결정론 지향적 환경 : 사회적·정치적·경제적 환경과 분위기가 행정활동에 영향을 미쳐 행정활동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상실시킨다.
- ㉤ 공직에 대한 위신의 저하 : 공직에 대한 가치와 열망이 줄어들고 다른 직업에 비하여 바람직한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 공직과 정부에 대한 신뢰성 상실을 초래하게 된다.
- ㉥ 정치적 후원 증대 : 정치적 후원의 증대와 고위공직자의 정치화에 따른 부패 가능성 증대(④번) ⇒ 정치와 행정의 연결장치(인터페이스)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하위직은 사기업의 논리로, 고위직은 정치의 논리로 분절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후원의 증대는 공직자의 정치화를 초래하고 그 결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직부패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 8.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의 분업구조 관련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직급교육과 인사교류가 효과적이다.
- ② 자원의 희소성 관련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자원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③ 조직침체 극복을 위한 갈등조장을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하다.
- ④ 개인의 특성 관련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공감대 형성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이 바람직하다.
- ⑤ 업무의 상호의존성에 따른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부서 간 접촉의 필요성을 늘려 주는 전략이 유효하다.

★ 2013년 시험대비 Point 행정학 교재 p. 531~536.

정답▶⑤ [해설] 분화에 역점을 둔 직무설계로 말미암아 직무와 책임의 분할이 심한 경우, 조직단위의 구성이 기능분립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갈등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업무의 상호의존성이나 업무수행 책임의 모호성도 갈등상황을 만들 수 있다. ⇒ 해소방안 : 갈등을 발생시키는 조직 구조적 요인을 변화시켜 갈등을 좀 더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으로 인사교류, 조정담당기구의 설치, 이의제기 제도의 실시, 갈등을 일으키는 조직단위들의 합병 또는 분리, 지위체계의 개편, 업무배분의

변경 등을 들 수 있다.

문 9.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본 정책 개념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가치를 사실에 투사해서 얻은 행동계획
- ② 사회 전체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의 결과
- ③ 주어진 목표달성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효과적 활용계획
- ④ 사회문제의 정의를 통한 문제의 해결방침
- ⑤ 목표와 수단에 대해 구속력 있는 정부기관이 내린 결정

★ 2013년 시험대비 Point 행정학 교재 p. 206~208, 372.

정답 ▶ ③ [해설] ③번(주어진 목표달성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효과적 활용계획)은 '기획(Planning)'을 의미한다.

문 10.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론론에 따르면 보수는 매우 중요한 동기요인이다.
- ② 내용이론에는 형평성이론과 기대이론이 있다.
- ③ 동기부여란 개인과 조직이 욕구의 결핍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을 탐색하는 과정 지향적 행동을 의미한다.
- ④ 포터(L. Porter)와 롤러(E. Lawler)는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개인의 만족감을 주요 변수로 삼아 기대이론을 보완하였다.
- ⑤ 매슬로우(A. H. Maslow)에 따르면 자기실현 욕구는 사람마다 큰 차이가 없다.

★ 2013년 시험대비 Point 행정학 교재 p. 460~470.

정답 ▶ ④

[해설] ①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론론

- ④ 위생요인(불만족요인) 5가지 : 조직의 정책, 감독, 보수, 대인관계, 작업조건
- ⑤ 동기요인(만족요인) 5가지 : 직무상의 성취, 직무성취에 대한 인정, 직무내용, 책임, 승진(발전)

- ② 형평성이론과 기대이론은 과정이론이다.
- ③ 동기부여란 조직의 관리자가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적극적으로 행할 의욕을 일으키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④ 포터(L. Porter)와 롤러(E. Lawler)는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개인의 만족감을 주요 변수로 삼아 기대이론을 보완하였다.

Porter와 Lawler의 기대이론적만족이론

“보상이 적절하면 높은 수준의 근무성과가 만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

- ⑤ 매슬로우(A. H. Maslow)에 따르면 자기실현 욕구는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다.

A. H. Maslow는 하위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욕구가 발생한다고 인식하므로 개인별로 충족되고 있는 욕구수준은 다르다고 보고 있다. 나이(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사회인), 개인이 처한 상황(실업자, 취업자, 미혼, 기혼), 능력 등에 따라 충족되는 욕구수준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기실현욕구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본다.

문 11. 정책결정 참여자로서의 관료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합주의는 관료의 적극적 역할을 옹호한다.
- ② 엘리트주의에서는 관료의 적극적 역할보다는 지배계층의 역할에 주목한다.
- ③ 철의 삼각에서 관료는 특수 이익집단의 이익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
- ④ 다원주의에서는 외부집단이나 지배계층보다 관료의 역할을 더욱 중요시한다.
- ⑤ 이슈네트워크에서는 이슈에 따라 관료가 방관자가 되거나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 2013년 시험대비 Point 행정학 교재 p. 217, 250.

정답▶④ [해설] 다원주의에서는 외부집단의 역할을 더욱 중요시한다. 대의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주요 공직자가 공식의제 채택 및 정책형성과정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나 다시 선출되기 위해서는 일반대중의 요구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반대중들이 이익집단과 주기적인 각종 선거를 통하여 정책의제설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본다.

문 12. 「국가공무원법」 제46조에 나타나 있는 보수결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 ①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가계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직위별로 정한다.'
-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직위별로 정한다.'
- ③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로 정한다.'
- ④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와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직위별로 정한다.'
- ⑤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계급별·직위별로 정한다.'

★ 2013년 시험대비 Point 행정학 교재 p. 694.

★ 2013년 시험대비 한국의 행정법령 4월 특강

주제 24(자료 78쪽).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정답▶② [해설]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 |
|--|
| 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제4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3. 임기제공무원 |
|--|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 13.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과의 비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계약직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채용계약에 따른다.**
- ②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법적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을 따른다.
- ③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보수재원은 모두 국비로 충당한다.
- ④ 정무직 지방공무원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모두 임용권자가 대통령이나 소속 장관이다.

★ 2013년 시험대비 Point 행정학 교재 p. 621~630, 642-645.

★ 2013년 시험대비 한국의 행정법령 4월 특강

주제 24 국가공무원법 ~주제 25 지방공무원법(자료 68~쪽).

정답▶① [해설] ① **계약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

- ②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을 따른다.
- ③ 국가공무원의 보수재원은 국비로, 지방공무원의 보수재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충당한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④ 정무직 지방공무원은 지방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③ " 특수경력직공무원 "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⑤ 국가공무원은 임용권자가 대통령이나 소속 장관이고, 지방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문 14. 서울시의 공동세 제도를 설명한 것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 ①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력의 형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제의 본래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 ③ 25개 자치구의 취득세의 50%를 서울시가 형평화의 논리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 ④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 ⑤ 양여금과 비슷한 원리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2013년 시험대비 Point 행정학 교재 p. 993.

★ 2013년 시험대비 지방자치론 5월 특강

주제 84(자료 124쪽). 한국의 지방세 - (2) 지방세기본법

정답▶③ [해설] 지방세기본법[시행 2013.8.29.] [2013.5.28., 타법개정]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①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지방세법」 제9장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와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는 제외한다)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 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區)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문 15. 우리나라 정부예산의 과목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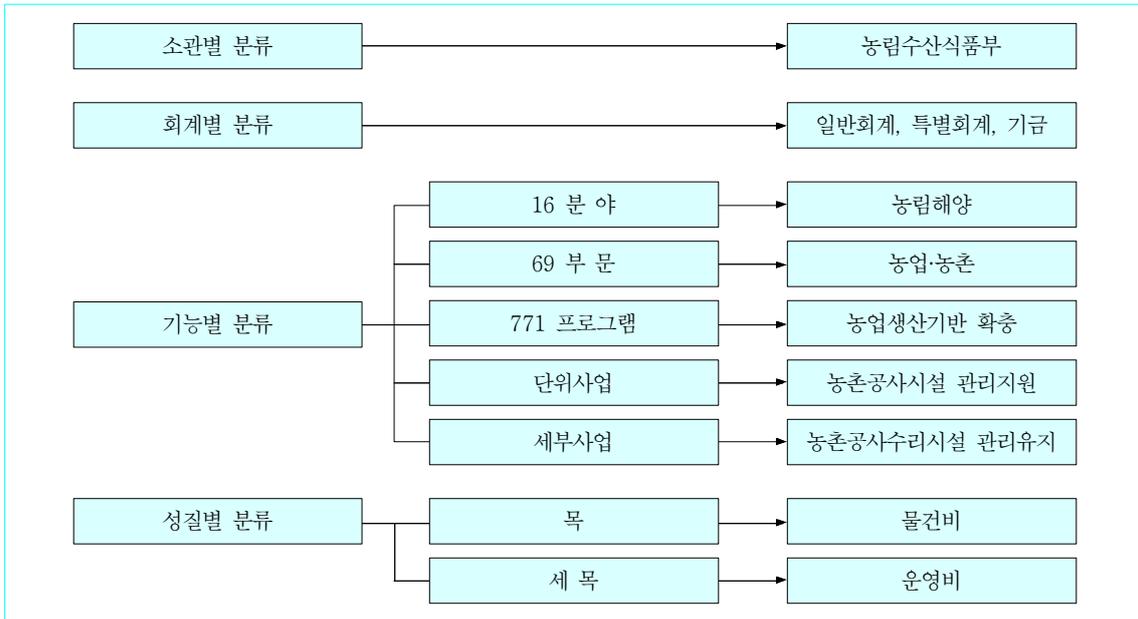
- ① 우리나라 예산은 소관별로 구분된 후 목별로 분류되고 마지막으로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된다.
- ② 성질별로 분류할 때 물건비는 목(성질)에 해당하고, 운영비는 세목에 해당한다.
- ③ 기능을 중심으로 장은 부문, 관은 분야, 항은 프로그램, 세항은 단위사업을 의미한다.
- ④ 장 사이의 상호융통(전용)은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 ⑤ 세항의 경우 입법과목이고, 목은 행정과목이다.

★ 2013년 시험대비 Point 행정학 교재 p. 822-8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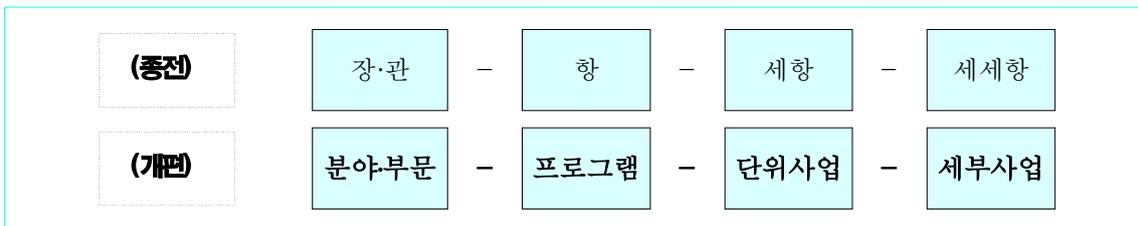
★ 2013년 시험대비 한국의 행정법령 4월 특강

주제 44(자료 130쪽). 국가재정법

정답▶② [해설] ① 우리나라 예산분류



- ② 성질별로 분류할 때 물건비는 목(성질)에 해당하고, 운영비는 세목에 해당한다.
- ③ 기능을 중심으로 장은 분야, 관은 부문, 항은 프로그램, 세항은 단위사업을 의미한다.



④ 장·관·항 사이의 상호융통(이용)은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⑤ 장·관·항의 경우 입법과목이고, 세항·목은 행정과목이다.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문 16. 예산 및 조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원가절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현금주의회계가 발생주의회계보다 유리하다.
- ②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는 비례세(proportional rate tax)라는 점에서 조세형평상 직접세에 비해 불공평하다.
- ③ 이로온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서비스에 정부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예산의 정치적 기능에 속한다.
- ④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개발연구사업의 개발 성과물의 사용은 예산완전성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⑤ 예산이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예산 한정성의 원칙은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이다.

★ 2013년 시험대비 Point 행정학 교재 p. 876, 998, 32, 798-797.

★ 2013년 시험대비 한국의 행정법령 4월 특강
주제 44(자료 132쪽). 국가재정법 제53조

정답 ▶ ④ [해설]

- ① 원가절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발생주의회계가 현금주의회계보다 유리하다.
- ②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는 비례세(proportional rate tax)라는 점에서 조세형평상 직접세에 비해 불공평하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의 10%를 부과하는 정률세(단일비례세율이 적용되는 조세)이다. 부가가치세는 단일비례세율로서 세부담이 종국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저소득자의 세부담이 가중되는 역진성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생활 필수품에는 면세하는 반면에, 사치품이나 소비억제품목에는 고율의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으로써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또한 탄력세율을 채택하여 경기변동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조세의 중립성 유지와 배분의 합리화에 기여하고, 수출에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환급하여 줌으로써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한 투자에 대하여는 투자자에 대한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 또는 환급하여 줌으로써 투자의 촉진효과가 있다.

비례세는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금액의 정도에 따라 정비례로 세율을 부과하는 세제이다. 예를 들면 소득액 100원에 대하여 1%, 200원에 대하여 2%, 300원에 대하여 3%의 세율을 적용시키는 조세이다.

조세부담의 형평에는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이 있는 바, 수평적 공평이란 동일한 조건하의 납세자는 동일한 조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수직적 공평이란 담세력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많은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조세부담형평의 원칙은 이러한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이 입법차원에서나 집행차원에서나 제대로 구현되고 보장됨을 내용으로 한다.

③ 이로온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서비스에 정부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예산의 경제적 기능(자원배분, 자원조달, 소득재분배, 경기조절, 경제성장, 경제안정, 경제계획, 경제발전 기능 등)에 속한다.

④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개발연구사업의 개발 성과물의 사용은 예산완전성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를 사용에 따른 대가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세입세출 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지출에 관한 내역을 국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예산이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예산 단일성의 원칙**은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이다.

문 17.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효과적이다.

② 기획기능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③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④ 예산비목의 증가를 통제하기 쉽다.

⑤ 입법부에 의한 예산 통제에 효과적이다.

★ 2013년 시험대비 Point 행정학 교재 p. 855, 858-866.

정답 ▶ ① [해설] ② 기획기능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계획예산제도)

③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한다.(품목별예산제도)

④ 예산비목의 증가를 통제하기 쉽다.(영기준예산제도, 품목별예산제도)

⑤ 입법부에 의한 예산 통제에 효과적이다.(품목별예산제도)

문 18.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이 정부가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민참여가 보다 수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③ 법적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립시켜야 한다.

④ 자발적 조직들 간의 연계망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⑤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수직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 2013년 시험대비 Point 행정학 교재 p. 41.

정답 ▶ ⑤ [해설] Wilson의 ‘집단행동의 딜레마’

집단구성원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공공재는 구성원이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혜택을 보게

되므로 공공재의 공급에 누구도 자신의 노력을 제공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협력에 의한 '사회자본론'이나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및 규제'가 있다.

○ 정부규제론(Government Regulation) : 대규모 잠재집단이 공통의 이익을 확보할 수 없게 될 때 정부가 이들의 문제해결을 돕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거나 규제하게 된다. 예컨대 소비자집단의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막기 위하여 정부가 소비자문제에 개입하여 공급자인 기업을 규제하게 되는 것이다.

○ 사회자본론(Social Capital) : 사회구성원들이(무임승차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 공동의 목표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문 19.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는 사회의 모든 곳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 중 지식정보사회가 행정조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오히려 정부관료제의 계층제적 구조가 강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 ②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해 조직구조를 보다 경직화할 필요가 있다.
- ③ 조직의 신축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 ④ 수평적인 형태로 연결된 네트워크 구조가 증가할 것이다.
- ⑤ 조직의 신축성을 보장하는 조직이론의 탄생을 강요하고 있다.

★ 2013년 시험대비 Point 행정학 교재 p. 590~592.

정답▶② [해설]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해 경직적인 관료제 조직구조를 보다 신축적인 탈관료제 조직(학습조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문 20. 라이트(D. S. Wright)의 정부 간 관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립형은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 간 경쟁 관계를 유지한다.
- ② 포함형은 정부간 관계의 이상적 모형으로 간주된다.
- ③ 포함형은 정치적 타협과 협상에 의한 정부 간 상호 의존관계이다.
- ④ 중첩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된 경우이다.
- ⑤ 분리형은 재정과 인사 등의 독립적 기능이 있다.

★ 2013년 시험대비 Point 행정학 교재 p. 935~936.

정답▶⑤ [해설] 정부 간 관계의 유형(D. S. Wright, 1978)

- ㉠ 분리권위형(The Separated-authority Model)
 -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권위의 한계가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는 관계
 -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독립적, 자치적으로 운영
- ㉡ 포괄권위형(The Inclusive-authority Model)
 -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포괄하고 있는 형태

- ㉞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자치권이 극히 제한, 고유사무의 비율이 아주 낮고 대부분이 위임사무
- ㉟ 중첩권위형(The Overlapping-authority Model)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상호 의존적 관계(협상적 관계)로 보는 입장

고득점 확보를 위한 수험 대책

**‘자신을 가장 잘 이해시키는 강사의 선택’ !!!
시험의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합니다 !!!**

- (1) 단순 ‘암기식’ 학습을 지양하고 충분히 쉽게 ‘이해’ 하는 학습을 하여야 한다.
- (2) 행정학 이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와 이론의 전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 (3) 특정 행정이론이 등장하는 배경과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여야 한다.
- (4) 서로 대립되는 이론들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이론의 장·단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 (5) 최근 행정이론의 핫이슈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정리해 두어야 한다.
- (6) 행정과 관련된 최근 ‘개정법령 내용’ 과 ‘제도개혁’ 에 대한 내용은 특히 주의를 기울여 학습해야 한다.
- (7) 평소 학습을 하면서 중요한 요점은 꼭 메모하여 정리해 두어야 한다.
- (8) 행정학 학습은 반드시 ‘객관식 전문가’ 의 강의를 수강하면서 철저한 ‘객관식 시험 준비’ 를 지향하여야 한다.

Point 행정학은

**수험생 여러분의 최종합격을 위하여
계속 힘차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